+

## ███구동에서



김종민 논설실장

2026년 7월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 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문을 발표했다. 이른바 '대구경북특별시'로 법적 지위는 서 울특별시에 준한다. 정부는 국가 사무와 재 정이양등전폭적으로 지원한다.

경남도와 부산시도 새로운 통합지방정부 를 신설하거나, 최상위 기구인 준주(準州)를 두는 내용의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 중이다. 내년에는 정부 차원 에서도 실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. 대전시, 세종시, 충남도, 충북도 등 4개 시도 는 행정통합보단 느슨한 형태의 '충청광역연 합'을 이르면 2025년 1월 발족한다. 이미 각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, 자치법 규제정안을 마련했다.

그렇다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사정은 어떤 가. 초광역화 흐름 속에 행정통합 관련 논의 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상생과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구심체마저 유명무실하다.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 대 갈등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실질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실상은 '따로 국밥'이다.

왜일까. 상생협의회가 핵심 의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.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으로 육성해 호남 발전을 견인하고, 광주공

## 행정통합, 허송세월 안하려면

항 부지를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인데도 10년이 되도록 표류 중이다. 광주시와 전남 도, 무안군 3자 간 입장이 얽히고 헝클어져 솔로몬의 지혜라도 구해야 할 상황이다.

년 만에 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권 메가시 티의 첫발을 내디뎠다. 그것도 초광역 교통 망을 확충하고 산업 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등 경제동맹을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 다. 행정 통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을 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들었으나 늦은 감이 있다.

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·전남 행정통합이 이슈였다. 대구·경북 등과 달리 협의가 단절 된 것 같다며 구체 계획을 추궁한 것이다. 이 에 강기정 시장은 "선 기능 통합 후 행정통합 원칙에 공감하고 광역철도, 에너지 정책 등 을 먼저 함께해나가고 있다"고 해명했다.

전남도는 특별자치도 연내 입법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. 도민 공청회, 국회 세미나 등 으로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.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만큼 에너지·관광·농어업·첨단 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 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운다.

시도민들은 우리만 뒤처지지 않을까 마음 이 급하다. 지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피 해가 주민들에게 넘어온다. 걱정이 많다. 광 주시는 경제공동체에, 전남도는 특별자치도 에 공들이고 있다. 전북과 함께 호남권 연합 도 거론되기만 했을 뿐 이제 막 시작이다.

함흥차사다. 2020년 11월 민선7기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"두 지역 정치, 경제,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

진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"며 합의문에 서명했다. 용역 1년, 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로드맵과 함께 시청과 도청은 기능을 유지하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7 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진전 이 없다.

> 국감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"광주전남 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하며 행정통합에 대해 유보적 결론을 내렸고 결국 기관도 분리됐 다.이게 현주소다"고 꼬집었다.

> 지방행정체제는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 작 이후 30년이 되면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, 행정 구역 생활권 불일치 등 급격한 환경 변 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. 초광역권이 국 토 균형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접근 전략인 것이다. 전문가들도 500만명 정도가 돼야 자 생력이 있다고 본다.

2024년도 한달 여 남았다. 이대로 올해도 넘 어갈 것이다. 그야말로 허송세월 아닌가. 내 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%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. 출생아는 급격히 줄 고 있다. 광주·전남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 른 광역시·도와 견줘봐도 감소세가 뚜렷하 다. 향후 10년, 20년 뒤 닥칠 '혹독한 겨울'을 제때 대비할지 염려스럽다.

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,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,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의 굵직한 정치 일정이 이어진다. 지금이 바 로 골든타임이다. 결단해야 한다.

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. 생존의 길이다. 더구나 광주·전남은 역사적으로도 한 뿌리 생활공동체다. 해서 진정 의지가 있 다면 시도민에게 답해야 한다.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진짜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.

# 社說

### 데이터센터 예산 찔끔 전남도 투자유치 의지 있는가

전남도가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100기를 유 치할 계획이지만 예산도, 정책도 뒷받침되지 않 고 있다는 지적이다. 데이터센터는 40MW급 1기 구축에 5천억원 안팎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 로 15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. 특히 취·등 록세와 지방소득세 등 건전한 재정 효과에 톡톡 히 기여하는 효자 시설이다.

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서는 기피하지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선 계통포화 해소와 함께 해상풍력, 태양광 사 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에 전남도는 해남 2 5기, 광양·순천 30기, 영암 20기, 함평 20기, 장성 5기를 목표로 정한 바 있다. 그런데 도의회에 제 출한 내년 투자유치 활동 예산은 책자 제작 500 만원, 업무추진비 550만원 등 총 1천50만원에 불 과했다. 이마저도 올해에 없던 여비가 늘어난 수 치다.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나 실질적인 지원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.

전남도는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과 공동으로

수도권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. 내로라하는 데이 터센터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,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데이 터센터 건립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전남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. 해남 기업도시의 '솔라시 도 데이터센터파크 조성'과 정부 데이터센터 수 도권 완화 정책에 따른 지역 유치 1호인 '장성 카 카오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' 추진 상황은 우 수 사례로 소개돼 호응을 얻었다.

1기 당 최대 1조원까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 트 유치 전략치곤 지나치게 허술하다. 홍보책자 하나 들고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한다는 지극히 안일한 생각 아닌가. 데이터센터와 연관된 전· 후방기업도 포함해 소자·부품산업까지 육성하 는 등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지금대로면 빈말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.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, 국 비 확보,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요구를 귀담아 들 어야 할 것이다.

#### 5·18 성지 옛 도청 복원 시민 공감대가 중요하다

5·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이자 시민군의 심장부였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.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추진단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도청 본관의 경우 외관 창호를 비 롯한 출입구와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통로 를 재구축해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되살리고 있 다고 설명했다. 또한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마감재·바닥재·벽지까지 최대한 원형 복원하는 중이다.

내부 콘텐츠는 항쟁 열흘 간의 서사를 담기 위 해 노력했다. 스크린을 통한 전시와 도청 본관 서무과 외벽에 담긴 탄흔, 탄두 등에 대해 QR코 드를 활용, 스마트폰을 이용해 AR영상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. 본관 시민군 상황실은 당시 사용했던 총기류와 궐기문도 전시한다. 이 밖에 경찰국 본관 1층에서는 12·12 군사반란부 터 5·18에 이르는 서사를 홀로그램 입체 영상으 로 선보이기로 해 기대를 모은다. 특히 추진단이 주목하는 것처럼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'소년이 온다'의 주 무대인 만 큼 작품을 연계한 공간도 필요해 보인다. 소설 속 주인공 동호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옛 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고(故) 문재학 열사를 모 티브로 하고 있다. 퇴직 기자들의 '언론검열관 실' 복원 요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치를 특 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지만 자료 수집 후 검토를 거쳐 꼭 마련돼야 하겠다.

2025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전체 건설 공정 률은 34%, 전시 콘텐츠 구현 공정률은 10%에 이 르는 상황이다. 추진단은 사업 전반의 윤곽을 제 시한 지난 2월 착수보고회, 내부를 꾸릴 콘텐츠 를 공개한 9월 시민 설명회 이후 언론사 대상 소 통회의를 개최, 추가되거나 수정된 세부 전시 안을 발표했다. 1980년 5월 모습 그대로 '원형 복 원'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. 광주시, 5·18단체, 시민사회와 수시로 협의,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 시 보완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. 준공에 이 르기까지 콘텐츠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.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이다. 한 치의 허점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.

#### 김영순의 '문화터치'



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

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. 장밋빛인지, 회색빛인지 알 수가 없다.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 내일이 정해진다는 것이다. 더욱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 우 벅차다.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인 한 파고가 거세기 때문이다. 인류문명의 대 전환기라 할 수 있다. 해서, 그에 대한 해법도 했던대로가 아니라 특별한 조처여야 한다는 거다. 거기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론 까지 겹쳐 우리를 사정없이 옥죄고 있다. 이 에 광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. 그에 대 한 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. '광주의 미 래를 묻다\_광주의 지도가 바뀐다'는 주제 로 지난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정책 포럼이 그것이다. 자칫 암담해질 수 있는 상 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반가웠다.

포럼에선 인공지능(AI) 기술 발전의 시대 에 맞는 광주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5·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저출생·고령화·청년 유출·기후위기·불평등·사회분열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모델과 실천동력

## 광주는 지금, 미래를 묻고 답할 때다

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출했다. 광주연구원 최치국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광주는 이제 민 주도시에서 '포용도시'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. "광주가 제2의 성장을 위해서는 직면해 있는 저출생·청년유출·기후위기·불 평등·사회분열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새 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"면서 시민·전문 가·정책결정자 등이 참여하는 포용도시 포 럼을 운영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. 이에 더해 '글로벌 포 용도시 특별법 제정'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. 문화광 주 조성 방안으로는 광주 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한 데 이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제의 선택과 집중, 축제의 5·10월 분 류 통합 운영 등이 거론됐다.

이날 포럼은 급변하는 시대적 전환 속에서 광주시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체득하는 자리였다. 도시 재창조와 도시 재구조화를 통해 '공간+산업+사람'의 융복합적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하고 문화예 술중심의 융복합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 다. 발제자는 일본 도쿄역 마루노우치 지구, 런던 킹스크로스 등을 재구조화의 도시재생 사례로 들면서 이들 지역의 성공전략이 복합 용도, 대중교통중심개발, 보행친화, 스마트 시티 등이었음을 밝혔다. 또 미래도시주거의 정책방향으로는 '광주형 공공주택' 공급을 제시하며 이를 통한 새로운 도시 이미지 구

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인류가 처음 맞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주가 어떻게 해야 희망찬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가. 그에 대한 방향성이 포럼에서 잡 혔다. 그러나 뭔가를 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 가 관건이다. 돈이 없으면 도시의 어떤 의사 결정도 무의미해진다. 또 시민의 주도적 참 여도 추진동력이 된다. 무엇보다도 포럼에서 제시된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이 견이 없었다. 우리가 미래를 묻고 답하며 실 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의 핵심이었 다. 더욱이 실행력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는 게 이구동성이었다. 이기훈 광주시 시민 사회지원센터장은 "20년 전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했지 만 당시의 장밋빛 청사진이 현재 무색하게 되었다"며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라고 했다.

강기정 광주시장은 결정적 순간에 광주는 늘 대단한 힘을 발휘해 구국의 길에 나섰으 며 광주의 그 힘은 '집중력'에서 나온다고 전 제한 뒤 "미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 집중 력을 보여야 할 때"라고 광주의 미래 만들기 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. 더불어 문화, AI, 민주주의 등의 산업 구축으로 호남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. 미래를 묻고 답한 뒤 우리 모두가 응집력 있게 실행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광주는 대전환기의 위기를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. 내일, 광 주는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것이 확실하다.

#### 그래픽 뉴스

#### 김장철 배춧값 안정세…10개월 만에 한포기 2천원대로

가을배추 출하에 따라 배춧값이 점 차 하락하면서 21일 포기당 소매가격 이 3천원 아래로 떨어졌다. 이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에 따르면 배 추소매가격은 포기당 2천990원으로 내 렸다.

배춧값이 2천원대로 떨어진 것은 올 해 1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이다. 올해 8 -9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여름 배 추 생육이 부진했고, 일부 생산지에서 는 가뭄까지 겹치며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9월 27일 9천963원까지 치솟았다. 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자 배춧값이 지난 1일 4천원대로 떨어졌 다. 이에 더해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 사별 할인이 더해지면서 배춧값은 지 난 11일 3천원대로 내렸고 이날 2천원 대가됐다.

이날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

**배추소매가격**추이 단위:원(포기당) 9월 27일 9.963 평년\*대비 14.5%↓ 전년대비 13.7% ↑ 11월1일 4,875 11월 21일 2,990 9월 10월 11월 \*최대·최소가격제외한 3년 평균 **ଡ**ି연합뉴스 자료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

격 중 최대·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

평년과 비교하면 14.5% 낮은 수준이다.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.7% 높다. 배추와 마늘, 고춧가루,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됐다. 다만 김장철 무 가격은 아직 강세다. 이날 무 1개 소매 가격은 2천630원으로, 1년 전보다 86.0% 비싸고 평년보다 29.8% 높다. /연합뉴스

### <<> 독자투고



이상기온 등 지구 온난 화로 인해 온 산을 형형색 색으로 붉게 물들던 단풍 이 늦은 가을철을 맞아 많 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교 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

상되며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
202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 사 망자 2천551명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는 886명 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사망자 수의 약 38%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보행자사고에 대 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. 특히, 해 가 짧아지는 동절기로 접어들면 보행자사고

가 급증하는 시기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욱더 주의해야 할 시기이다.

농촌의 경우 보행자사고는 도시권과 다르 게 보행자가 동행할 수 있는 보행로가 잘 갖 취지지 않은 일반국도나 지방도, 군도에서 일어난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. 이처럼 가드레일이 없는 국도나 지방도・군도 등 도 로변 보행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농촌지역 에서는 노인들의 보행 빈도가 잦아 사고가

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. 또한, 농촌지역에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 출 목적으로 도로상에서의 공공근로가 잦은 만큼 차량 운행 시 더욱더 안전 운행에 주의 가 요구된다.

경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 속, 신호위반, 난폭운전 등 위반차량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해야 하고, 보행자들은 갈수록 해가 짧아지는 동절기인 만큼 보행 시에는 운전자들의 눈에 띌 수 있게 항상 밝은색 계 통의 옷차림으로 보행을 하여야 한다. 또한 운전자들은 농촌지역 지방도 등을 통행할 시 에는 항상 노인 등 보행자들이 도로변을 걸 어 다닌다는 생각으로 서행하면서 안전 운전 했으면 한다. 〈곽현태·고흥경찰서 점암파출소장〉

+

※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

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서행 안전 운전을 하자

## 광주매일신문

1991년 11월 1일 창간

http://www.kjdaily.com

회장 馬亨列 사장·발행·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

(우)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(062)650-2000 구독신청·배달안내 (062)650-2022 편집부 650-2090 지역특집부

정치부 650-2030 사 진 경제부 650-2050 논 설 사회부 650-2040 T V 본 부 문체부 650-2065 서울지사(02)

광고문의 650-2099 650-2060 마케팅본부 650-2080 650-2070 경영지원국 650-2011 650-2006 사 업 본 부 650-2009 650-2007 국 650-2020 무 786-9488

광고국 650-2016 편집국 650-2017 업무국 650-2019

·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. ·2002년 4월 30일 등록. 등록번호 광주 가10(日刊) ·구독료 월 15,000원 1부 800원